도내 진보성향 野 2당 "이춘석 의원직 사퇴해야"

"전북 정치 발목 잡지 말라"

이 의원, 주식거래 논란에 민주당 탈당 · 법사위장 사퇴
혁신당 도당 "도민 기대 생각해 사퇴로 책임져야"
진보당 도당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 응당 처벌을"
민주, 이 의원 제명… 법사위장에 추미애 의원 내정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식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춘석 국회의원(무소속, 익산갑)에게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됐고, 약 1억원 상당의 AI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며 "국민적 분노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탈당했지만,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명을 결정했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며 "무소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고, 전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또 "지금의 상황은 국회의원직이 지역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금 전북 정치에 그런 여유는 없다. 바퀴가 빠진 자동차처럼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책임이고, 신뢰로 존재한다"며 "전북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절박한 기대를 생각한다면, 이춘석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전북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에서 이춘석 의원의 현 사태는 전북도민들에게 충격과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주식 차명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불법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진보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집권여당으로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다 최근 주식거래 논란으로 인해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고 탈당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하루 만에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고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포토라인에 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민주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출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유기식품도 녹색제품으로 포함해야"

민주 윤준병 의원, '친환경 인증제품 녹색제품 적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포함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인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녹색제품은 환경표지나 재활용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정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농 식품이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은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윤 의원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농민들의 노력에 정부가 구매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 체계화

윤수봉 도의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 발의
정기적 심리검사 실시 · 검사비 예산 지원 등 담아

도내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완주1)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는 도내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이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가 담고 있는 '교직원'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교육청 관할 전 인력을 포함한다.

또한 '마음심리검사'란 교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 원칙,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검사 결과 철저한 비밀 보장, 교직원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금지 △검사 이후 심리 상담과 치료, 사후관리 포함 종합적인 심리 건강 지원체계 마련 △대학·병원·심리상담센터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검사비와 상담비, 연구·평가비 등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다.

이에 윤수봉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도내 교직원이 장기적인 심리 건강을 유지하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교직원은 정기적인 심리 상태 점검과 전문적 상담 지원을 통해 번아웃(burnout)과 스트레스성 질환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심리적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수해복구 현황 파악

요천 물놀이시설 수해피해 현장 찾아 점검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지난 5일, 집중호우로 인한 요천 물놀이시설 수해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조치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자치행정위원회, 경제농정위원회가 시설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는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부지를 찾아 침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은 물놀이시설은 시민복지를 위한 시설물인 만큼 조속한 복구 완료를 주문했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은 피해복구 과정에서 인명피해, 시설물 파손 등이 없도록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선거일 제외 옥내 확성장치 활용 상시 허용

민주 박희승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법제사법위원회)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만호 기자